

朴 한마디에... 여야 '폭염정국' 한풀 꺾이나

■ '세계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 여야 새국면 여 "환영·공감"... 긴급 당정회의 대책 논의 야 "국민분노에 항복 선언... 사과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세계 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전격 지시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세금폭탄' 논란으로 야기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단은 최고조로 치달던 여야 간 충돌 수위가 한풀 꺾이는 형국이다. 하지만, 향후 해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 대통령의 지시에 공감과 환영을 표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이날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다만, 정부의 세계 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며 가두 서명운동에 돌입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이자 국회 포기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증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

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대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민주당은 장외에서 세계개편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부 발표에 앞선 사전 당정협약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감한 이슈인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 없이 선부르게 접근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또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증세가 아니다', '거위의 깃털' 등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19일에는 결산국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다면서 민주당에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기국회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9~30일 강원 홍천의 리조트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 일단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심각한 국정 혼란을 야기할 데 대해 사과가 먼저"라고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나아가 세금투쟁 운동의 방향을 수정할 태세다. 원안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자평 속에 '세금폭탄 저지'라는 목표에서 이제는 '부자갑세 철회' 등으로 민주당의 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부자·갑세 철회,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 등이 선행되는 방식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당정협의 총체적 무능력을 스스로 자백한 일'로 규정, 대어 전선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낮 예정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은 직장인이 많이 오가는 여의도 내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김한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민주당은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서명운동도 예정대로 이날 시작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세금투쟁'에 본격 착수하는 날 박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소 '김'이 빠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내부적으로는 세금 문제가 정국을 뒤엎으면 서 자칫 국정원 이슈가 묻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없지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등 개편된 비서관들과 수석비서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금폭탄' 논란 방치 정국 운영 부담

■ 박대통령 '세법개정안' 재검토 지시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한 세금논란을 조기 진화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

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지시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금폭탄' 논란을 빚는 세계 개편안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하는 반기 정국 운영에 커다란 부담

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세금은 중산층 개개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자칫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계속 될 경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선거인 10월 재·보선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금논란으로 상처를 입은 중산층 다독이기에 직접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회복지 향상

증세운동 시작

시민단체, 복지세 도입 청원

복지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증세운동을 시작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지난 8일 국회에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어 이날 24일부터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 시민이 직접 나서서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계개편안에 대해 "실질적인 증세 조치 없이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개혁,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비증세 방식의 재원 확충과 함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직접적 증세 등을 요구했다. 또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사회 복지세를 추가로 부가해 여기서 거둔 세금은 모두 복지를 위해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100조원 규모의 직접세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책개발·이론적 역할 아닌 정치적인 것까지 확대 부담"

최장집,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이사장직 사임

독자세력화 안 의원

정치적 타격 예상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주말 이사장직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최 교수는 12일 "원래 연구소에서 정책적, 이론적 역할을 할 생각이었는데 연구소 역할이나 기능이 정치적인 것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지난 10일 안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최 교수의 어떤 말도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 교수께서 이사장직을 맡으신 이후 학자적인 양상을 가지고 하신 말씀도 주위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최 교수와의 앞으로 관계에 대해 "만나보고

상의드릴 것이다. 그리고 계속 조언이나 가르침도 배워갈 예정"이라고 완연 결별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 교수의 이사장직 사임은 독자세력화를 추진하던 안 의원의 축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안 의원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인제 영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은 자신의 1호법안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20주년 정책토론회'에 참석,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자금세탁방지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실명제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의결

본회의 장외투쟁 등 실천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오는 15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234명 의원 가운데 찬성 212인, 반대 7인, 기권 15인으로 연장안이 통과됐다. 이날 표결은 국회 본회의장 개보수 관계로 전자표결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아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진행됐다. 국정조사특별위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19일, 21일까지 사흘에 걸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민주당의 장외투쟁, 국정원 국정조사 추가 증인채택 등을 놓고 실천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사초(史草) 실종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 적극 협조해야 할 분(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또 직간접적으로 협조해야 할 민주당은 거리로 나가 국민을 선동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현역 의원을 비롯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제가 증인이 되기로 했다"면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인 김부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유한회사 케릭스